

한빛원전, 위조부품 피해소송 고작 4700만원?

한전KPS 상대 손해소송 가동중단 피해 수백억인데... 납품계약서에 발목잡혀 부품가격 이상 청구못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영광)원전에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공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전 KPS를 대상으로 4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여기에는 부품 교체 비용 외에 당시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 공급 사실이 드러나 한빛 원전 5·6호기가 50일 이상 가동을 중단한 데 따른 책임 여부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원전 사고 발생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역 지원액

도 줄어드는데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가동 과정에서 검증도 안된 부품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지역민들의 불안감, 매출액 감소, 원전 신뢰성 상실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수원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 KPS로부터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다가 원전 공급 부품 전량 교체 상황이 빚어졌다며 지난해 10월 KPS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2년 원전 부품 공급업체가 외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을 중단했었다. 한빛원전은 KPS 측으로부터 퓨즈·스위치 등 위조된 품질보증서(S등급→Q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원전에 사용되는 품질보증서 부품은 안정성 등급인 Q등급을 받아야 하며, S등급은 일반산업용 부품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당시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 2012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5·6호기에 대해 각각 55일, 58일 가동을 중단하고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을 전량 교체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 47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은 그러나 한전KPS측과 체결한 부품 공급 계약서상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제외했다. '공급된 부품에 대한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부품 공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계약서를 근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빛원전 주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몇 년간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50일 넘게 원전

가동이 중단되던 때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지역 지원금 감소, 지역민 불안감 뿐 아니라 원전 신뢰성 저하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빛원전 민간감시기구 A위원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하루 매출만 10억씩 감소하는데, 50일 넘게 가동 중단된 데 따른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향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상권 청구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부품 교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행 계약서상 매출 감소 등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광주 U대회 유치 활동비 공개되나

광주교법 "비공개 대상 아니다"

광주시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신인도 추락 위험 등을 내세워 '비공개'했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지원은 '공개'해야 할 정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관련 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 6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배일에 싸여 있던 유치활동지원비 세부 내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교법 제 2 행정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광주시에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지원비 세부 집행 내역(일차별, 건별)과 증빙 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3년 유니버시아드 유치 추진 과정에서 집행한 유치활동지원비 세부 내역은 광주시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내지 다른 해당 국가 사이에 유치활동 지원비 정보 공개가 필요한지, 유치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내지 광주시에 대한 신인도 추락 위험, 유치권락 노출 등으로 향후 국제 행사 유치활동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광주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8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관련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이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 일부 내역만 공개했다. 이에 이씨는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광주시는 집행 내역만 공개하고 다른 정보는 비공개해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자전거 안전교실
광주 북구 자전거 안전교실이 20일 동림동 산동교 천수공원 내 자전거 교육장에서 열렸다. 동호회원들이 강사와 함께 트랙을 돌며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조폭·성매매 중요단서 제공하면 최고 1억 포상금

앞으로 조폭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폭폭력 범죄, 성

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기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급증...검찰 비상근무

광주지검 87명 입건 전국 두번째

6·4 지방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 부터는 후보간 고소·고발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무책임한 폭로·비방 등 흑색 선전 등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24시간 비상 근무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22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6·4)' 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총력 수사 체제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과 검사가 참여하는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지검 등 전국 58개 지검·지청은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공안부 외에 특수부·형사부인

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현재 선거법 87명을 입건, 17명을 기소(구속 4명)했고 나머지 6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광주지검의 선거사법 적발 현황은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벌써 혼탁·과열 선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광주지검의 경우 광주와 나주, 담양 등 전남 6개 시·군을 관할하며 지난 5회 지방선거 때 선거사법 390여명을 입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4회 지방선거 때는 순천지청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선거사법을 적발했다. 선거사법 적발 현황으로만 보면 매년 선거 때 마다 과열·혼탁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흑색 선전, 금품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자살·가정폭력...오열하는 오월

'가정의 달'인 오월이 오열(嗚咽)하는 오월이 되고 있다. 최근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사는 30대 남성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사소한 시비 끝에 부부간 주먹다짐을 벌이는 등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할 5월이 '가정 불화의 달'이 되고 있다. 이모(31)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겨 있는 것을 형(3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장문은 알루미늄 포장지가 덧대져 있었으며, 방안에선 타다 남은 번개탄 잔해물이 남아 있었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자녀와 떨어져 형 집에서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홀로 사는 이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 중이

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40분께엔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박모(2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직전 가족에게 "먼저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의 달인데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많다. 20일 새벽 3시10분께 서구 쌍촌동에 사는 최모(32)씨 부부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30)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유는 주먹다짐을 하다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수는 모두 30건. 이는 한 달 평균 25건보다 5건(16.6%) 많은 수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년동안 세차장 8곳 돌며 월세 견뎌 50차례 도둑질

○...월세를 겨우 들이듯 2년에 걸쳐 8곳의 세차장을 돌며 같은 곳을 무려 17차례나 찾아가 금품을 털 30대 남성이 철장신세.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35)씨는 지난 2012년 8월15일 새벽 2시에 광산구 산정동 A주유소 셀프세차장 동전 교환기를 부순 뒤 현금 15만 원을 빼가는 등 최근까지 광산구와 서

구를 누비며 8곳의 세차장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훔쳤다는 것. ○...가나 긴 잠복·탐문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은 경찰은 "(김씨가) 마치 월세를 견뎌 8곳을 상대로 꼬박 꼬박 범행을 저질러, 업주들로서는 도난당한 금품보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게 더 윤택통이 치밀었을 것"이라고 설명. /이종행기자 khh@kwangju.co.kr

15P - 13층

- 실坪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坪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13층,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 실坪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2억원 이상, 2년정도